

‘세 손가락 혁명’, 로크의 저항권을 넘어서는 저항

박은홍, 『불복종의 정치학: 미얀마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
(드레복스, 2024)을 읽고

이지윤 서강대학교 글로벌사회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I. 미얀마와 타이의 ‘세 손가락 혁명’¹

2021년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시켰다. 2020년 총선에서 군부 세력이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부정선거라는 핑계를 대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2021년 2월 22일, 군부의 폭거에 미얀마 국민들은 불복종운동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이던 저항은 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 저항의 중심에 명실

¹ 필자는 이 글을 2024년 12월 3일 이전에 썼다. 그날 밤, 많은 시민들이 한국 민주주의 자체에 타격을 받는 그 현장에서 맨몸으로 저항을 했고, 충격과 공포 속에서 뉴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기를 지켜본 다른 시민들처럼 필자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필자는 이 서평에서 미얀마와 타이의 불복종운동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하지만 스탠리 코언을 참조하며 먼 곳의 타자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필자는 은연중에 미얀마와 타이의 불복종운동이 전하는 메시지를 선별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얀마도 타이도 아닌 2024년 끝 무렵 대한민국에서 군사독재 때나 있었던 계엄과 이를 거부하며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불복종의 정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월린은 폭력의 사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가 서구 정치 전통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지만, 이를 너무 무심코 받아들이면 권력의 본질적 핵심이 폭력이라는 원초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2월 3일의 밤은 한국 사회가 월린의 이런 경고를 여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경고에 맞설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현재진행형인 이 불복종의 정치의 의미를 담으려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그날 밤 이전의 사고를 남기기 위해 글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상부한 연방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군부 권위주의는 물론 아웅산 수지의 포퓰리즘도 거부하는 미얀마 청년세대가 있다.

타이의 청년들도 2014년 5월 22일의 군부 쿠데타 이후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불복종운동에 나섰다.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윗 찬오차 총리의 즉각 사임, 새로운 헌법의 제정, 군주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청년들의 저항은 2020년 타이 수도 방콕에서의 대규모 불복종운동으로 발전했다. 청년들의 저항은 독점 개혁, 군 개혁, 지방 분권 개혁과 함께 국왕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제112조의 개혁을 내세운 까오끌라이당에 대한 방콕 유권자 대부분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2023년 총선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은 까오끌라이당은 이전 민주화세력인 88세대의 지지를 받았던 프어타이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었다.

박은홍 교수는 『불복종의 정치학: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포퓰리즘의 본질인 정치적 부족주의에 의존한 민주주의 한계와 이 한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두 나라 청년들의 불복종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고자 했다.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들 두 나라의 기득권 세력에게 자유주의 혹은 공화주의는 불온한 용어다. 반면 포퓰리즘은 비자유주의적 국가민족주의와 친화력이 높다. 정치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포퓰리즘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강고한 지지층을 갖는 포퓰리스트가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포퓰리즘은 탈식민화 과정에서, 새로운 민족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효한 정치이념이자 기제로 자리잡았다”(381-2).²

이런 관점에서 그는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불복종운동에 대해서 “세 손가락 혁명은 인민의 권리를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국가 폭정에 대해 인민들은 필요하다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음을 설파한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의 저항권 옹호론을 연상하게 한다. 미얀마와 타이의 사례는 자유주의가 서구와 비서구의 경계를 넘어 폭력만 남은 국가를 향한 불복종운동의

² 이하 『불복종의 정치학』에서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에 쪽수로 표시한다.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i)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이 주도한 불복종운동은 배타적 국가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385)라고도 언급한다. 한국의 “동남아 정치연구의 공백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성과”(최경희, 2024: 242)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이 글은 단지 저자의 문제의식과 평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로크의 두 얼굴

박은홍 교수는 타이와 미얀마 청년들의 불복종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로 로크의 저항권 옹호론을 소환한다. 이런 소환은 세 손가락 운동이 그간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이 공유하고 있던 비자유주의적 국가민족주의 및 이와 친화력이 높은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함축하고 있다는 저자의 관점과 상응한다. 타이와 미얀마에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집단에 매몰되지 않은 개인, 위로부터 부과되는 “숭배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개인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ii).

이와 같은 관점은 자유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에도 부합한다. 데이비드 헬드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정당화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도전적인 견해를 제시”했고, “바람직한 정치 질서란 인민이 정치적 권위와 억압적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본성과 이해관계를 계발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헬드, 2010: 497)을 만들어냈다. 헬드는 자유주의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다(헬드, 2010: 514). 존 로크의 사상은 이런 자유주의의 첫머리에 위치한다. 로크의 저항권 옹호론은 인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부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타도하고 전복되어야” 함을 웅변한다(문지영, 2007: 109).

저자의 로크 소환은 일차적으로 자유주의 및 로크의 저항권의 이런 측면에

착목하고 있다. 하지만 서평자가 보기에 로크의 사상이 지닌 두 얼굴을 읽어내는 것이 박은홍 교수가 강조하는 ‘세 손가락 혁명’의 의미를 좀 더 명료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첫째, 로크는 “권한 없이”, 그리고 “부여된 신탁에 반해 인민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 인민이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해서 그들의 입법부를 원상태로 복귀시킬 권리”를 갖고 있음을 역설했다(로크, 2023: 177). 이것이 바로 주권자 인민이 지닌 저항권이다. 나아가 로크는 인민이 단지 “폭정에서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폭정을 “예방할 권리”도 가졌으며(로크, 2023: 242), 또한 그 저항은 비폭력적 저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절대적 권력에 대해 “가격하는 것”(로크, 2023: 258), 곧 폭력적 저항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법부 혹은 군주가 사회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했는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단정적으로 “인민이 재판관”이며,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해고할 권력 역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민이 판단한다고 답한다(로크, 2023: 265). 정부 설립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인민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위임된 권력이 그 목적을 위배할 경우 권력은 다시 인민에게 돌아온다. 저항권의 행사는 인민주권의 발현일 따름이다.

하지만 로크가 제시한 저항권 옹호론의 이런 급진적인 얼굴 이면에는 저항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보수적인 얼굴이 있다. 로크는 저항권이 법에 호소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을 때에만 정당하다고 했다(로크, 2023: 229-210). 게다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위력에 직면한 경우에도, “공중의 평화와 정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몇몇 소수의 사적인 인간들이 때로 고통을 겪는 위험에 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로크, 2023: 228), 부당한 권력의 행사가 미치는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의적 권력의 압제가 소수에 게만 피해를 줄 때, 저항권이 유효하게 발동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이 그들의 피해에 공감해야 했다(로크, 2023: 231). 나아가 로크는 저항권 행사의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주체가 인민이라고 단언했지만, 인민은 그 권리로 자신에게 익숙한 체제를 바꾸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체제의 결함을 수정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안다고 해도’ 인민은 잘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로크, 2023: 245). 로크는 자의적이고 절대적인 권력 행사가 사회구성원에게 고통을

가할 때마다 인민이 저항한다면, 이는 “모든 정체를 어지럽히고 전복시킬 것이며, 정부와 질서 대신에 무정부 상태와 혼란만 남길 것”이라고 보았다(로크, 2023: 226). 그러나 로크가 보기에 인민은 저항권 행사에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이었다..

로크는 저항권의 성격과 행사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법률을 초과해서 작동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두 얼굴을 갖는다. 한편에 사회구성원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이 그 목적을 위배할 경우 작동하는 저항권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상세히 규정할 수 없는 법의 한계에 따라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권(大權)을 설정한 것이다.

대권은 인민의 신탁에 의해, 즉 인민이 입법권과 더불어 통치자에게 부여한 권한이지만 법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권력이다. 그것은 “법에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문구에 반하는 경우에도 공공선을 위해 지배자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러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요, 그렇게 처리하는 일에 대해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로크, 2023: 187).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규범이 사회구성원의 자유, 권리,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권은 “입법 권력 그 자체마저도 지배하는 으뜸가는 근본적인 자연법”(로크, 2023: 156)에 따라 법규범을 어겨서라도 사회 자체를 보존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권력이다. 로크는 이런 대권을, 그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곧바로 실행이 필요한 단계에 요청된다는 이유로 “집행 권력을 가진 자”에게 부여한다(로크, 2023, 183). 이로써 입법권을 최고 권위로 두는 로크의 기본적인 정부 체계는 긴급사태에 직면한 사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뒤집힐 가능성을 갖는다.

푸코는 17세기의 정치사상에서 쿠데타란 ‘비합법적 무력 또는 군사적 수단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구제”라는 이름 하에서 “‘법에 따라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 자체에’ 명령하는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지적한다(푸코, 2011: 358-9). 또 칼 슈미트는 독일의 국법학에서 국가긴급권이란 “민중의 일시적인 열광의 시기”에 “헌법의 지속이 국가의 존립에 대하여 위협을 의미하는 경우”에 “형식적인 법을 단순히 존중하여 국민과 국가를 해체시키고 파멸케 하기”보다 “헌법 자체를 배제

하고” “형식적인 위법의 죄”를 지면서 별도의 “헌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정부가 지닌 “일종의 쿠데타의 권리”라고 언급한다(슈미트, 1996, 272). 법을 초월하여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보다 사회 자체를 보호하고 국가를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로크의 대권은 정부의 ‘쿠데타의 권리’에 근접한다. 로크의 대권은 공공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로크는 법을 초월한 대권 역시 “명백히 인민의 좋음과 정부를 그 진정한 토대 위에 확립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일 때 정당하다고 언급한다(로크, 2023: 182). 그러나 법률에 반해서, 합법성을 중단시키면서 긴급하게 집행되는 대권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를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로크는 스스로 제기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그런 대권을 가지고 있는 현존 집행 권력과 그의 의지에 소집 여부가 달려있는 입법 권력 사이에는 지상에 어떤 재판관도 있을 수 없다”(로크, 2023: 190). 대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시 인민에게로 돌아가고, 대권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저항권이 된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저항권에 관한 로크의 두 얼굴이다.

이런 독해는 로크의 사상이 ‘세 손가락 혁명’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것이 저항했던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방어 논리로 전유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로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철학적 배경 등의 이유로 그의 추론과 체계에 일정한 빈 곳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자유주의 사상 및 저항권 이론의 의미를 옹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로크가 제시한 논변의 공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급진적으로 다시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로크의 사회계약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을 공통의 확립된 법으로 예방하고 심판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수립하는 합의의 과정이다.³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기 소유물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맞서 더 큰 안전을 보장받는다”(로크, 2023: 116). 이미 자기의 소유를 타인에게 인정받는 자연 상태는 ‘완벽한 자유와 평등’의 상태이자 사회적인 상태이다.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는 홉스적인 자연

³ 이 절에서 로크의 사회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전반적으로 월린(2009)을 참조한 것이다.

상태를 상정하지 않기에 로크의 사회계약은, 흡스와 유사하게 공통된 규칙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정치체의 결정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더라도, 새롭게 사회 상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자연 상태의 배치로 되돌리는 과정이며, 정치 질서는 최소주의적 성격을 갖게 된다. 월린(2009)에 따르면, 로크는 이런 사회계약의 구조를 통해 '사회가 유지하려면 어떤 유형의 정치 질서가 요구되는가'라는 기존의 질문을 '어떤 사회적 배치가 통치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인가'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소유권을 사회계약에 대한 암묵적 동의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상속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을 동의의 반복적인 확인과 긍정으로 설명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의 영속화를 통해 정치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사회계약 자체가 논리적으로 구성원들이 사회에 권력을 넘긴 다음, 그 권력을 적절한 이들에게 위임하는 2단계의 구조를 취한다.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다수)의 저항은 이런 구조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또한 사회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정도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권이 제한되는 것이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권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도 이 구조의 논리적 귀결이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회가 정치 질서를 규제하는 근원적인 권력이자 동시에 정치 질서를 지탱하는 안전판이다.

로크의 사회계약을 이렇게 이해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것이 사회와 정치적 권위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사회 내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유의 보장이라는 이유로 침묵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로크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 평등'을 말하면서도, 출생, 지위, 부 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사실이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용인한다. 사회 내부의 관계에 따른 불평등은 "관할권이나 지배권의 측면에서 서로에 대해 누리는 평등과 양립"한다는 것이다(로크, 2023: 73). 또 로크의 사회는 소유의 향유를 통해 해당 사회의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는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부여하지만, 정치체에 소속될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배제한다(로크, 2023: 146). 그 사회의 인민이 될 권리는 최초 사회계약을 맺을 때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해 영구적으로 고정 불변하게 확정되고 폐쇄되며, 사회 내부의 불평등은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할 사항으로 남는다. 로크는 이 점을 당연시했고, 이런 사회가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맞설 수 있을 때, 사회는 "이미 집을 가진 자들을 위해 세워진 더 나은 거처"(월린, 2009: 182)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로크의 침묵을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처음의 논변에 대질시킬 수 있다. 로크는 “어디든 폭력이 사용되고 위해가 가해지는 곳”이라면, 심지어 그곳이 사회 상태일지라도, 또한 그 가해자가 “정의를 집행하도록 임명된 자”일지라도 양자 사이는 전쟁 상태이며, 피해자가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적절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에게는 “공격자에게 대항할 전쟁의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았다(로크, 2023: 34).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심판할 길이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권위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회계약이다. 그리고 로크는 그 갈등과 분쟁이 이미 수립된 사회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와 정치체 사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항권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회와 정치체 사이에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곧 누가 사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로크는 어떻게 답할까? 이를 둘러싼 갈등에서 폭력과 위해가 정의를 집행해야 할 자의 손에 의해 가해진다면, 또 이런 갈등이 사회와 정치체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심지어 사회와 정치체 사이에서 구성원이 누리는 이른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 사회 내의 관계를 억압적으로 구성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면 로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마도 로크는 사회가 단지 정치 질서를 지탱하는 안전판일 뿐, 정치 질서를 규제하는 근원적인 권력이 되지 못하도록 정치 질서에 의해서 조형되고 억압되는 상태, 곧 본질에 있어서 전도된 로크적 세계를 볼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로크적 문제의식에 따른 사회계약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 세계에서 더 이상 대권과 저항권의 모호한 균형은 유지될 수 없다. 사회와 정치체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 구성된 저항권의 두 얼굴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세계에서 저항은 정치체가 사회를 조형하고 규율하는 양식 자체에 대해,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에 대해, 그리고 사회구성원이 될 자격 자체, 곧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를 두고 일어난다(Arendt, 1973: 296). 이 저항은, 로크적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로크의 저항권을 넘어선 저항이다.

III. 무엇에 대한 불복종인가

이제 다시 박은홍 교수를 따라서 미얀마와 타이의 저항을 살펴보자. 미얀마와 타이의 ‘세 손가락 혁명’은 무엇에 대한 불복종인가? 『불복종의 정치학』은 미얀마와 타이에서 일어난 불복종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충실한 ‘사건사적인’ 접근과 깊이 있는 ‘거시구조적인’ 또는 ‘역사적인’ 접근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미얀마의 독립에서부터 2021년 군사쿠데타와 ‘봄의 혁명’을 거쳐 현재까지, 그리고 타이의 1932년 입헌 혁명에서부터 2023년 5월 총선거와 현재에 이르는 시간적인 범주를 다룬다. 그리고 두 국가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기원, 특징, 쟁점 등을 역사구조적인 분석틀로 조망하며, 나아가 ‘불균등속도의 아시아’라는 공간 속에서 두 국가의 군부와 시민사회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웃 효과’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추론해낸다.

이와 같이 미얀마와 타이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박은홍 교수의 강조점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두 나라 청년들의 불복종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 곧 2021년 이후 미얀마와 2014년 이후 타이에서 청년들이 주도한 불복종운동의 새로움에 있다.

미얀마의 경우,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시민불복종을 주도한 세력은 2011년 개혁개방 이후 정치적 개방을 경험한 청년세대이다. 이들은 군부의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보장하는 민-군 관계의 의사결정 영역 내에서 기존 헌법을 바꾸려고 시도한 이전 미얀마의 민주세력 곧 아웅산 수지를 중심으로 한 88세대 정치세력과 차별점을 갖는다. ‘로힝야’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존 민주화 세력은 사회구성원이 될 자격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외면하거나, 아웅산 수지의 신비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치로 그 갈등을 주변화시켰다. 초점을 ‘군부 후견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의 제도 개혁으로 맞출 때, 사회 자체의 재구성은 개혁의 장애물로 취급되거나 후순위로 미뤄졌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군부가 대중 통치기술로 이용했던 국수주의, 버마 민족주의, 수호자주의와 연결된 포퓰리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전개된 저항은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둔 88세대의 정치적 기획을 88세대가 외면하고 주변화시켰던 지점과 연결시키고 있다. 미얀마의 저항은 이제 기존

민족민주동맹(NLD) 중심주의, 버마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모든 반군부 세력을 통합하고, 소수자 및 소수민족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여 70년에 이르는 내전을 종식하는 명실상부한 연방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전환, 이를 위한 헌법의 개정은 여전히 중요한 목표다. 하지만 이제 이 목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평등을 향한 대장정”(73)의 결과물로 성취될 것이다.

타이의 경우, 박은홍 교수는 타이 청년들의 저항이 국왕-군부-관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 국왕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주목한다. 2001년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체제 변혁에서 체제 개혁으로 노선을 바꾼 기존 민주세력인 ‘10월세대’가 탁신 총리의 부패 스캔들의 여파 속에서 친탁신과 반탁신으로 분열했을 때, 타이 청년들이 다시 저항의 초점으로 재점화시킨 것은 바로 국왕모독죄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들은 국왕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누구나 왕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주장했고, 마침내 2023년 5월 총선에서 국왕모독죄 개정과 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까오끌라이가 제1당이 되는 성과를 쟁취했다.

이런 타이의 민주화 과정에서 박은홍 교수는 “사실상 국가·종교·국왕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제하는 절대군주제 시기의 국가정체성이 지속되는 근대적 절대군주제”(332)라는 타이 정치체제의 특유한 성격을 강조한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타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관료적 정체 혹은 반(半)민주주의로 보는 시각”은,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112조를 대폭 강화한 1976년 이후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 반(半)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독특한 유형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점, 헌법 위에 국왕과 왕실이 존재하고 왕실 자문기관인 추밀원을 매개로 왕실이 정치에 개입하고 “근대화, 민주화 모두 왕실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308, 320). 특히 타이의 근대적 절대군주제에서는 “군주 네트워크 일원으로 선거 결과 불복을 반복하는 민주당”(330)을 포함하는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란 의미의 ‘푸디’, 즉 방콕 중산층”(281)을 위시한 시민사회 역시 “선출된 권력이 군주 네트워크의 이익과 권위를 침해할 경우 왕권 수호를 기치로 한 군사 쿠데타를 직접적 혹은 간

접적으로 지지”(330)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결국 국왕모독죄를 중심으로 “탁신 혐오도 거부하지만 탁신 포퓰리즘도 거부”(vi)하는 타이 청년세대의 저항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정치 질서에 의한 사회의 규율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미얀마와 타이 청년세대의 불복종은 군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억압적 정치질서가 자신의 안전판으로 조형해 놓은 사회적 규율 질서와 담론에 대한 불복종운동이기도 하다. 여러 소수자 및 소수민족에게 동등한 인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권위주의 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규율의 핵을 저항운동의 초점으로 삼는 것, 군부나 국왕에 의해서든 그에 저항한 세력에 의해서든 정치적 지지에 동원하기 위해 사회 내의 균열을 이용, 재생산, 강화하는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것, 이런 시도는 사회를 정치 질서의 안전판이 아니라 저항의 근원적인 권력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사회계약을 확인받고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민으로서 자격 및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개방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계약을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미얀마와 타이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불복종운동의 새로움이 이런 점에 있다고 할 때, 박은홍 교수가 왜 이들의 저항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서구중심주의적 가치에 대비되는 아시아의 정체성과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은 일률적으로 예단하기 힘든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서구중심주의적 가치 혹은 아시아적 가치와 특정 사회의 정치와 맺는 관계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서구의 가치를 부과하는 패권적인 체계에 저항할 때 아시아적 가치가 저항적·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아시아적 가치가 해당 사회의 권위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외견상 서구중심주의를 추종하는 듯 보이는 담론과 실천이 그 사회에서 저항적·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⁴ 박은홍 교수의 분석은 문화적 보편 대 문화적 특수,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비를 바탕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다룸으로써, 아시아적

⁴ 서구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강정인(2004) 참고. 옥시덴탈리즘의 저항적 활용에 대해서는 샤오메이 천(2001) 참고.

가치의 의미를 후자에 고정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독해의 맥락에서 보면, 박은홍 교수의 초점은 ‘국가민족주의-포퓰리즘-‘아시아적 가치’라는 계열이 “‘아시아식 민주주의’, ‘우리식 민주주의’”(386)로 이어지고 후자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 즉 ‘미얀마식·타이식 ○○주의’를 떠받치는 담론적 토대에 대한 비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동천 교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방식은 서양의 민주주의 사회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는 관찰,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서양의 이념이어서 비서구 사회에 적용하려면 해당 사회에 맞는 민주주의의 모형을 고안해야 한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출제 오류”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박동천, 2024: 88, 111). 그럼에도 이런 발상이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의 설계도를 찾아내는 지성주의적 과제에 조용하여 인민의 의사라는 표상을 인민을 위한 통치(위민)로 환원하는 정치, 즉 “어떤 우월한 판단력의 담지자”(박동천, 2024: 95)가 ‘인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인민 자신보다 잘 헤아려 행하는 정치 또한 민의에 바탕을 둔 정치’라는 주장이 힘을 갖는다. “유교민주주의론은 ‘서양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부분은 취하고 다만 ‘서양’ 부분만을 다른 요소로 채울 수 있다고 본다. 그 요소란 기본적으로 인민의 의사를 절차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대신에 온정적 간섭주의 또는 현자에 의한 정치에 의해 표상하는 방식이다”(박동천, 2024: 95-6).

‘현자에 의한 정치’는 인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인민 자신보다 현자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민이 원하는 것 혹은 원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민 자신의 판단과 현자의 판단이 어긋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질적인 풍요, 국가와 민족의 위신과 안녕, 충과 효와 같은 규범 등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며, 이들을 종합하는 ‘○○식 ○○주의’와 같은 관념 체계가 세워진다. 역사는 이와 같은 시도가 사람들을 매혹하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 여러 사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가 인민 자신의 판단과 현자의 판단 사이의 간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일까? 플라톤의 『국가』는 이와 같은 의문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는지, 그리고 ‘현자에 의한 정치’라는 관점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동

굴의 비유’는 현실과 진리의 단계적인 위계 구조, 외양과 실재의 전도된 구조를 나타낸다. 가시적인 현실이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계에서 ‘철학자-정치가’의 행위 기준은 그 자신만이 인식한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철인왕의 정치는 동굴에 갇힌 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외양의 세계로 내려가는 동정심과 희생에서 나왔으며, 진리를 구현하는 그의 정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해야 하는 바를 이루어줄 것이다. 하지만 동굴의 비유 말미에서 플라톤은 인민의 판단과 현자의 판단 사이의 차이가 결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전자는 다만 그들의 오판과 무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자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들을 풀어 주고서는 위로 인도해 가려고 꾀하는 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든 붙잡아서 죽일 수만 있다면, 그를 죽여 버리려 하지 않겠는가?”(플라톤, 2005: 453).

이런 파국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 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의 마지막에 이르러 플라톤은 ‘금·은·동의 신화’, 즉 사회구성원들을 각자의 출생과 능력에 따라 위계적인 계층 체계에 결박하는 거짓 건국 신화를 요청한다. ‘금·은·동의 신화’는 진리에 따라 정치를 펼치는 철인왕에게조차 사회 구성원을 진리로서 인도하는 목적을 위해 거짓이 허용되고 또 필수적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이데올로기=허위’라는 서양 정치사상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테마의 출발점을 이룬다. 우리의 맥락에서 주목할 점은, 현자에 의한 정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신화는 단지 정치의 결과적 효용성만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형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이 될 자격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국가민족주의-포폴리즘-아시아적 가치-미얀마식·타이식 ○○주의’가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미얀마와 타이 청년세대의 불복종은 이 담론 계열의 고리가 작동해 “국가를 견제하는 자율적 시민사회”(iii)의 형성을 차단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도이다. 서평자가 보기에, 박은홍 교수가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IV. ‘방관자’의 시선을 넘기

박은홍 교수는 미얀마와 타이의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과 전개는 물론 그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도 외부 행위자들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장기간의 내전 상태가 전개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외부 행위자들의 태도가 저항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군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의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는 내전 초기 국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은 저항,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이는 불복종운동이 굴하지 않고 길어짐에도 한국 사회의 관심은 점점 더 식어가는 듯하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미얀마와 타이의 일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역시 뿌리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인권 침해의 가해자나 방관자의 부인 심리와 담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한 스탠리 코언은,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이 ‘나는 타조가 될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유사하다”(코언, 2009: 344)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문제를 아주 잘 알거나 심각하게 염려한다면 오히려 비정상”(코언, 2009: 339)이라고도 언급한다. 우리의 책임감, 의무, 감정은 물론 신체적인 요구와 감각 등도 사회적 맥락과 한계 내에서 구성된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해 본 굶주림과 깔커타 길거리 노숙인들의 굶주림이 같다는 말은 순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코언, 2009: 588).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태나 목숨을 건 저항에 대해서 안전하게 방관자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코언은 먼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 방관자의 시선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권의 가치를 시인한다는 것”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걸인과 앰네스티 광고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우리와 그들은 관계가 없다고 분리하면서 사생활의 안전한 “허구의 세계”로 침잠해갈 때, 우리의 삶과 사회는 “부인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코언, 2009: 590, 591).

그럼에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 먼 곳의 타자들에게 공감하고 우리의 도덕적

세계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동일화를 비약적으로 초월”할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넘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코언은 그 방법이란 “사이비 보편주의 또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 경계선”의 설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코언, 2009: 588). 우리의 맥락에서 이는 미얀마와 타이의 불복종운동이 지닌 보편적인 현재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의 불복종운동이 과거 우리가 지나온 민주화의 국면에 해당한다고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를 견제하는 근원적인 권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은 누구에게 있으며 각자는 각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시 점화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그들의 불복종운동에 대해 감정적인 응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헤쳐 나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방관자의 시선을 넘어서기 위한 의식적인 필요성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서평자는 이것이 박은홍 교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준비하기 전까지 나 자신 역시 방관자의 시선에 머물고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한다. 이 책이 좀 더 많은 사람이 방관자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투고일: 2024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7일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 로크, 존. 2023.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목적에 관한 시론』. 문지영·강철웅 옮김. 후마니타스.
- 문지영. 2007.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 & 로크』. 김영사.
- 박동천. 2024.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헌정주의.” 문지영·이지운·하상복 외. 『다시 읽는 ‘서구중심주의 비판’』. 까치.

- 샤오메이 천. 2001. 『옥시덴탈리즘』. 정진배 옮김. 강.
- 슈미트, 칼. 1996. 『독재론: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김효전 옮김. 법원사.
- 월린, 셸던. 2009. 『정치와 비전2: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지속과 혁신』. 강정인·이지윤 옮김. 후마니타스.
- 최경희. 2024.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의 의미를 찾아서.” 『동남아시아 연구』 34(2).
- 코언, 스탠리. 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옮김. 창비.
- 푸코, 미셸.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난장.
- 플라톤. 2005. 『국가·政體』. 박종현 옮김. 서광사.
- 헬드, 데이비드.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박찬표 옮김. 후마니타스.
- Arendt, Hannah.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court Brace & Company.